

< 현안과제 >

대전지역 자영업의 활성화 방안

김기희 황혜란

2008. 11.

차 례

제1장. 대전지역 자영업 현황 및 특징	1
1. 산업구조 변화추세	1
2. 대전지역 자영업의 특징	3
제2장. 대전지역 자영업의 쟁점과 정책과제	6
1. 자영업의 쟁점	6
2. 자영업부문의 정책과제	9
제3장. 자영업 활성화 방안	11
1. 자영업정책의 비전과 목표	11
2. 자영업정책의 기본방향 및 단·중장기 정책	14
3. 사업제안	17
4. 장기 추진과제 및 향후 연구과제	23

제1장 대전지역 자영업 현황 및 특징

1. 산업구조의 변화추세

1) 서비스산업화 진행

- 대전의 산업구성은 지역내총생산 기준 서비스업의 비중이 GRDP의 71.1%(2006)로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음
- 서비스업 비중의 변화추세도 1989년 57.7%에서 2006년 71.5%으로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표 1 > 대전의 산업별 GRDP 구성비 및 변화 추이

(단위 : %)

산 업	1989	1997	2000	2002	2004	2006
농림어업	1.9	0.8	0.5	0.5	0.4	0.3
광공업	25.9	19.9	21.3	20.2	19.1	17.0
전기·가스·수도사업	0.8	1.0	1.8	1.9	1.8	1.5
건설업	13.7	14.5	9.7	9.1	10.2	9.6
서비스업	57.7	63.9	66.8	68.4	68.5	71.6
도·소매업	10.1	9.1	8.2	7.7	8.1	8.2
숙박·음식점업	2.9	2.3	2.9	3.2	2.9	2.9
운수업	4.2	4.3	4.4	3.7	4.0	3.6
통신업	2.7	1.9	2.3	2.7	2.5	2.4
금융·보험업	5.0	6.4	7.6	8.7	8.8	8.3
부동산·사업서비스업	14.4	18.1	18.1	18.0	17.3	18.1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5.7	6.8	7.8	8.2	8.4	9.6
교육서비스업	7.4	7.8	7.7	8.2	8.4	9.3
보건·사회복지사업	2.2	2.9	3.3	3.5	3.9	4.7
기타서비스업	3.3	4.3	4.6	4.5	4.3	4.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통계청

- 1990~2006년까지의 서비스업의 지역내총생산 성장기여율이 82.3%로 1990년도 이후 실질적인 지역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양적인 측면에서의 경제의 서비스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표 2 > 대전의 산업별 지역내총생산 성장기여율 추이

(단위 : %)

구 분	90~06	90~93	94~97	98~01	02~05	2006
농 립 어 업	0.6	-0.1	0.5	3.8	-1.4	-0.8
광 업	0.3	0.1	0.0	1.3	-0.1	0.1
제 조 업	7.9	11.4	22.4	-54.5	-16.7	16.4
전기가스수도	-3.2	1.1	1.1	-13.0	-3.0	0.7
건 설 업	28.3	31.9	-5.7	84.2	10.5	-2.0
서 비 스 업	81.8	55.7	81.8	78.2	110.7	85.8
도·소매업	23.2	5.3	11.7	68.9	10.5	9.0
금융·보험업	12.9	4.2	42.9	29.3	10.9	-1.8
부동산·사업서비스업	16.1	16.7	24.6	-4.5	26.2	21.8

2) 전통서비스업 정체·쇠퇴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성장 추세

- 서비스업 중에서 전통서비스업이라 할 수 있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업 통신업 등은 1989년 이후 2006년까지 지역내총생산 비중이 추세적으로 모두 감소하고 있어 전통서비스업이 정체 또는 쇠퇴되고 있음
- 반면, 금융업, 사업서비스업, 사회보장, 교육, 보건·사회복지사업 등 소위 '지식기반서비스업'이라 불리는 서비스업종은 지역내총생산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성장하고 있음.
- 또한 사업서비스는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이 전체 서비스업의 25.6%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는 대덕연구개발특구내에 입지하고 있는 연구기관에 생산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다음으로 금융보험업(12.3%), 교육서비스(12.2%)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3) 전통서비스업, 규모의 영세성과 낮은 생산성

- 대전의 서비스업구조를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도·소매(24.6%), 음식·숙박업(15.7%) 순이며,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도소매업(35.7%)과 음식·숙박업(23.7%) 순으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산업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이들 산업분야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지역내총생산 비중이 낮아, 전통서비스업 부문이라 할 수 있는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체의 규모의 영세성과 낮은 생산성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요약하면, 종사자수 및 사업체 수 기준으로 볼 때는 전통 영세 중소기업의 구성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부가가치 생산액 기준으로 볼 때는 사업서비스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대부분의 전통 영세 중소기업은 매우 낮은 부가가치의 생산성과 소수의 사업서비스업이 높은 부가가치 생산성을 갖는 이중적인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표 3 > 대전의 서비스업 구성비

(단위 : 백만원, 명, 개)

구 분	GRDP		종사자		사업체		입지 계수
	GRDP	구성비	종사자수	구성비	사업체수	구성비	
도매·소매업	1,471,173	8.26	69,262	24.63	23,685	35.74	0.95
숙박·음식점업	524,447	2.95	44,199	15.72	15,721	23.72	0.90
통신업	421,549	2.37	4,259	1.51	264	0.40	1.02
금융·보험업	1,475,316	8.29	15,749	5.60	1,008	1.52	0.87
부동산·임대업	3,232,480	18.16	13,005	4.62	3,066	4.63	1.09
사업서비스업			40,375	14.36	2,554	3.85	1.24
교육 서비스업	1,669,510	9.38	38,741	13.78	3,566	5.38	1.05
보건·사회복지사업	835,238	4.69	21,657	7.70	2,506	3.78	1.10
오락·문화·운동관련 서비스업	-	-	10,074	3.58	3,575	5.39	0.88
기타공공·수리·개인서비스업	788,037	4.43	23,894	8.50	10,323	15.58	0.99

자료: 통계청

2. 대전지역 자영업의 특징

1)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주의 증가는 현저하지 않음.

- 대전지역의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포함)는 2008년 8월 현재 178천명으로 2003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지역경기가 좋지 않은 2007년과 2008년에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의 변화 추이를 보면, 2002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결국, 대전의 취업자는 인구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자영업자도 2007년부터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그 비중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로부터 전체 취업자의 증가속도보다는 자영업자의 증가속도가 더 느리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표 5 > 대전의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및 구성비 변화 추이

(단위 : 천명, %)

구분	종사상 지위	1989	1997	2001	2003	2005	2007	2008.8
종 사 자	임금근로자	254	376	405	456	474	503	509
	비임금근로자	132	188	203	183	172	177	178
	자영업주	98	147	161	153	148	152	151
	고용주	23	44	45	44	43	48	51
	자영자	75	103	116	109	105	104	100
	무급가족종사자	34	41	42	31	24	25	27
	계(취업자)	386	564	608	639	646	680	687
구 성 비	임금근로자	65.8	66.7	66.6	71.4	73.4	74.0	74.1
	비임금근로자	34.2	33.3	33.4	28.6	26.6	26.0	25.9
	자영업주	25.4	26.1	26.5	23.9	22.9	22.4	22.0
	고용주	6.0	7.8	7.4	6.9	6.7	7.1	7.4
	자영자	19.4	18.3	19.1	17.1	16.3	15.3	14.6
	무급가족종사자	8.8	7.3	6.9	4.9	3.7	3.7	3.9
	계(취업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 서비스업 중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종의 자영업자 비중이 68%

- 서비스산업의 자영업주를 산업별 구성비로 보면, 도매 및 소매업이 38.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숙박·음식점업이 29.9%로 이들 두 업종의 자영업주 비중이 68%에 이르러 자영업주 대부분이 이들 업종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2001~2005년 기간 중 변화 추이를 보면, 도·소매업의 자영업주 비중만 3.2% 감소하였고, 이 감소분이 다른 업종의 비중 증가로 나타나고 있음.

3) 취업자 중 전통서비스업의 자영업자 비중이 높음

- 서비스업종별 업종내 자영업자의 비중을 보면, 서비스업 전체로는 자영업자 비중이 27.5% 수준이고,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이 52.3%로 절반을 초과하는 수준이고, 이어서 오락·문화·운동관련서비스업이 43.8%, 도매·소매업이 43.3%, 공공·수리·개인서비스업이 38.5%를 차지하여, 이들 업종은 서비스업전체 평균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01~2005년 기간동안 서비스산업 전체의 자영업자 비중은 2.0%p 감소하였고, 업종별로는 도매·소매업이 가장 현저한 4.2%p 감소하였고, 오락·문화·운동관련업도 2.0%p 감소한 반면, 통신업은 2.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표 6 > 대전 자영업주의 서비스업종별 및 업종내 구성비 변화 추이

(단위 : %, %p)

비 고	2001		2005		증 감	
	업종별 비중	업종내 비중	업종별 비중	업종내 비중	업종별 비중	업종내 비중
서비스산업	100.0	29.5	100.0	27.5	-	-2.0
도매·소매업	42.0	47.5	38.8	43.3	-3.2	-4.2
숙박·음식점업	29.0	51.3	29.9	52.3	0.9	1.0
통신업	0.1	1.8	0.2	4.0	0.1	2.2
금융·보험업	0.2	0.7	0.2	0.8	0.0	0.0
부동산·임대업	3.4	22.9	3.7	21.8	0.3	-1.2
사업서비스업	2.3	5.6	2.5	4.7	0.1	-0.9
교육서비스업	3.9	8.6	4.4	8.7	0.5	0.1
보건·사회복지사업	2.6	12.0	2.9	10.5	0.4	-1.5
오락·문화·운동관련서비스업	4.9	45.8	5.7	43.8	0.8	-2.0
공공·수리·개인서비스업	11.7	40.1	11.9	38.5	0.2	-1.6

4) 대전은 6대도시보다 빠른 속도로 자영업자 비중 감소 추세

- 서2008년 8월 현재 대전의 자영업자 비중은 25.9%로 전국과 대전을 제외한 6대도시보다 낮은 수준임.
- 1989년 당시 자영업자 비중은 전국이 40.8%, 대전이 34.2%, 6대도시가 28.2%수준으로 현재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나, 이후 자영업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 특히 전국과 대전은 빠른 속도로 감소한 반면, 대전과 함께 대도시 특성을 갖는 6대도시는 완만하게 감소하여, 2008년 현재 대전이 전국 6대도시보다 자영업비중이 낮은 수

준입.

< 표 7 > 전국과 자영업주 변화추이 비교

(단위 : %)

구 분	1989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8.8
전 국	40.8	36.8	37.6	36.7	34.9	33.6	31.8	31.8
6대도시	28.8	30.9	31.4	31.0	30.0	28.6	26.9	26.5
대 전	34.2	33.3	32.2	33.3	28.6	26.6	26.0	25.9

5) 자영업자의 추세적 감소 속에 최근 지역경기 악화에 따른 비중 증가 추세

- 대전지역은 2002년부터 자영업자의 비중이 감소하였으나 2007년 들어 지역경기의 악화에 따라 자영업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전국 및 6대도시의 경우 2000년부터 자영업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전 국	36.8	36.7	36.0	34.9	34.0	33.6	32.8	31.8
6대도시	31.1	31.0	30.5	30.0	29.2	28.6	27.8	26.9
대 전	31.8	33.3	32.6	28.8	28.0	26.6	25.4	26.0

제2장 대전지역 자영업의 쟁점과 정책과제

1. 자영업의 쟁점

1) 자영업의 문제점

- OECD국가 내에서 자영업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음.
- 자발적 선택보다는 임금 부문에서의 퇴출에 따른 비자발적 진출의 성격이 강함.
 - 남성을 중심으로 한 준전문직 이상의 자영업 진출이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고용된 종사자 없이 단독으로 일하는 영세한 단독 자영업자들이 태반을 이루는 생계형 자영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

- 낮은 소득과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에 비정규직 임금 노동자와 함께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임금 노동자보다 매우 높음.
- 자영 고용주와 단독 자영업인, 남성과 여성 등 자영업 내부의 양극화가 임금노동자보다 심함.
- 자영업에서 서비스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생산자서비스나 사회서비스 비중이 높은 선진국형이 아니라, 생산성이 낮은 유통, 판매 및 개인서비스에 낙후된 구조에 머물고 있음.

2) 자영업자 과다의 문제점

-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또는 최근과 같이 경기 침체기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실직자 증가하고, 실직자의 자영업 창업 증가
경기가 침체할 경우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자들이 더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이로 인해 소비심리가 다시 위축되는 악순환 반복
- 2008년 현재 대전지역 자영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26%로서 OECD 평균 14%를 크게 웃도는 수준
 - 외국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중은 1인당 국민소득이 늘어나면 감소하는 경향보이나, 우리나라는 지난 10여년간 자영업자의 비중이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음
- 외환위기 이후 기업에서 방출된 가장들이 음식점이나 소매점 등을 열면서 자영업에 대거 진출했기 때문임. 이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제조업의 고용이 감소하고 서비스업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음.
-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 의미
 - 일본은 이군 140명에 음식점이 하나이고, 미국은 인구 416명에 하나, 우리나라는 불과 79명에 하나임.
 - 대다수의 음식점이 돈 버는 것은 차지하고 월세나 연금 내는 것도 쉽지 않은 실정, 특히 대형화된 전문업체와의 경쟁에 내몰린 영세 자영업자들은 자칫 도시민빈층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음.

① 자영업주의 영세성 심화

- 외환위기 직후 소규모 생계형 창업이 크게 늘어나면서 한정된 내수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자영업자의 수가 늘어나 대부분 경영의 영세성을 벗어나고 있지 못함
 - 외환위기 이전에는 제조업 비중은 낮아지고 서비스업 비중은 높아지는 산업구조의 변

화 및 프랜차이즈 사업의 확산이 자영업자 증가의 주된 원인이었던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대규모 기업 도산 및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자영업자 증가의 주된 원인이었음.

② 창업 증가로 인한 경쟁 심화로 경영난 가중

- 외환위기 직후 크게 늘어났던 여타 업종의 업체수가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의 업체수는 계속 늘고 있음
 - 이는 경험과 특별한 노하우가 없더라도 비교적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다는 업종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동시에 내수시장이 위축되는 가운데 과당경쟁을 유발하여 업종 전반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

③ 경기부진에 따른 매출 감소 및 부채상환압력 가중

- 최근 경기 부진이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동시에 국제금융 불안과 함께 막대한 빚을 일시에 갚아야 하는 부채상환 압력은 위기 발생의 도화선이 될 수 있음.
 - 최근 수년간 개인사업자에 대한 은행대출은 급증하였음. 대기업들의 대출수요 감소와 저금리 기조 정착으로 마땅한 자금운용처를 찾지 못한 은행들이 중소기업, 특히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늘렸기 때문임.
 - 그러나 자영업 부문에 대한 실제 은행대출 규모는 이러한 개인사업자 대출을 크게 상회할 가능성이 높음. 왜냐하면,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은행 창구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대출액은 개인사업자 대출이 아니라 가계대출로 분류되기 때문임.
 - 규모가 작고 사업 부문과 가계 부문의 구분이 명확치 않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이처럼 가계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임.
 - 여기에 최근 경기불황과 함께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감소하고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이들 대출이 대거 부실화 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향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기관들의 대출자산 관리에 있어서 일차적인 관리 대상은 자영업자가 속해 있는 중소기업 대출 상환압력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④ 고용사정 악화

- 조기퇴직,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임금근로자에서 이탈한 중장년층이 대거 자영업자로 편입한다면, 무급가족종사자 등 전체 취업자의 26%를 떠안고 있는 자영업 부문이 붕괴할 경우, 이는 고용사정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음.

- 또한 자영업 부채 위기가 심화되어 자영업자들이 대거 부채 원리금 상환 불능상태에 빠질 경우, 이는 신용불량자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수 있음.
- 그리하여 고용불안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신용불량자 무제 악화로 금융불안이 재연된다면, 이는 경제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치게 됨.

⑤ 내수회복의 걸림돌

- 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근로자들이 창업하기 쉬운 음식점, 도·소매업 등에 뛰어들면서 자영업자 비중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면, 불안한 취업구조를 지속하고, 특히 최근과 같이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자들이 더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이로 인해 소비심리가 다시 위축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임.

2. 자영업부문의 정책과제

① 임금부문 좋은 일자리 창출로 경쟁력 없는 자영업주 흡수

- 임금부문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쟁력 없는 자영업주를 임금근로자로 흡수하고, 또한 자영업의 하위층이 비경제활동인구를 흡수하도록 해야 함.
- 청소년(견습생 제도:호주), 고령층(연금제도 개선 : 핀란드), 여성(친가족적 근로 형태 : 아일랜드) 등 각 계층별로 경제활동인구를 증대시키려는 세계 각 국의 노력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이 실업률이 낮은 것은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기 때문이며, 실업률이 아닌 고용률을 기준으로 볼 때, 고용률 자체가 매우 낮기 때문임.
- 일본의 경우 해외로 나갔던 제조업체마저 다시 불러들여 국내 제조업을 살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관계를 만들어냄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키운 정부정책에 힘입은바 큼

② 대기업 중심 정책에서 탈피해 지역기업,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함.

- 우선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탈피해야 함.
 -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시장을 잠식하는 상황에서, 대기업과의 경쟁은 자영업을 더욱

위축시킬 것임.

- 따라서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 은행의 공익적 역할 강화, 중소기업 지원 강화에 책임 있게 나서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줌.

③ 준비 안된 자영업 진출 예방 및 준비된 자영업 창업 활성화

- 구직자에 대한 진로상담기능을 강화하여 자영업의 위험을 알림으로써 '준비 안 된 자영업 진출 예방
- 특히 자영업 창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지 않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는 경쟁이 이미 지나치게 치열하다는 사실을 예비 창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 있음.
- 자영업을 하는 경우 '준비된 창업'이 되도록 공공기관이 사업계획서의 작성을 도와주고 타당성에 대한 평가서비스를 제공.
- 고용안정센터를 중심으로 각종 컨설팅서비스와 직업훈련 기회 제공

④ 경쟁이 치열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부문의 원활한 구조조정 필요

- 경쟁이 치열하고 고용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과다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함.
 - 이 부문에서 방출된 노동력은 선진국에 비해 비중이 과소한 사회서비스업이나 보건의료 부문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됨.
- 서비스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이 무리 없이 직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안정과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영세 자영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직업교육 및 훈련시스템을 강화하여 이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⑤ 영세 자영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책의 실효성 제고

-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필요한 컨설팅서비스, 시장정보 제공,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시스템의 원활화 필요, 즉 서비스가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전달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함.

- 마케팅 혁신, 고객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직업훈련에 대해 영세 자영업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함.

제3장 자영업 활성화 방안

1. 자영업정책의 비전과 목표

1) 정책개선 및 개발의 필요성

① 기존 정책의 현황 및 추진경과

- 자영업 정책은 외환위기 이후 창업 및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지원으로 1999년부터 본격화 되었으나, 2005년 5.31 대책을 통해 컨설팅,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제공 정책 등이 추가되어 추진 중에 있음.
- 자영업 정책추진의 실행기구인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는 2006년부터 중앙정부에서 각 지자체로 이관됨으로써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추진의 계기를 마련하였음.

② 정책의 성과와 한계

- 자영업 정책은 당시 문제였던 실업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자영업의 과잉화 및 정책의존성 심화라는 문제를 초래하였음.
- 지난 2005년 5.31 정책도 자영업들이 정부정책에 의존하려는 성향에서 벗어나 자생력을 제고시키되 구조조정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추진되었으나 개선의 여지를 남김.

2) 자영업정책 추진의 필요성

- 지역경제에서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영업과 소규모 기업의 형태로 생산활동을 하는 소상공인은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가장 작은 기업군임.
- 자영업은 규모의 영세성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제주체임.
-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에 따라 기존의 산업사회와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이 대두되면서 지식창출, 활용능력이 혁신체제로의 성공적 전환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부상하였

음.

- 소규모 사업체인 자영업은 성장단계로 볼 때 중소기업의 초기단계로서 기업가정신과 혁신력이 가장 발 발휘될 수 있는 시기이므로 지역의 혁신주도의 산업성장구조 정착을 위하여 자영업의 준비된 창업과 성장기반 조성이 중요함.
- 따라서 건실한 자영업의 성장은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3) 자영업정책의 비전과 목표

① 비전의 설정

비전 : 희망 있고 함께하는 자영업 부문의 구축

- 희망 있는 소상공인 부문의 구축
 - 기업가정신이 충만한 자영업이 지역경제 성장의 밑거름이자 시발점이 되고, 열심히 일하는 소상공인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함.
- 함께하는 소상공인 부문의 구축
 - 경쟁에서 탈락한 영세 자영업도 사업전환을 통한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쟁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사업을 그만 두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재취업 유도 등의 구조개선 대책을 추진함.

② 정책의 목표

목표 : 자생력 확보와 구조개선

- 자영업 정책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생력 확보와 구조개선에 들 필요가 있음.
- 불확실성이 커지고 저성장 시대에 직면하고 있는 여건하에서는 영세 자영업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 월 100만원 소득 자영업 비중 목표 (전국)
 - 2004년 29.3% → 2007년 28.3% → 2010년 20.3%
- 대전지역 자영업 부문의 과잉화 문제는 자생력을 제고시키는 데도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과잉화 해소를 위한 구조개선 정책의 추진을 정책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 비임금 근로자 비중 목표 (전국)
 - 2004년 34.0% → 2010년 27.7%

4) 자영업정책의 추진전략

① 성장동력 확충

- 자생적 성장을 위한 간접지원의 강화
- 혁신주도형 소상공인 유도
- 고부가가치 분야 지원
- 재래시장의 혁신과 새로운 쇼핑공간으로서의 이미지 구축 지원

②. 인적자원 고도화

- 양적 및 질적 측면의 인력난 해소 위한 자영업 인력개발
- 청년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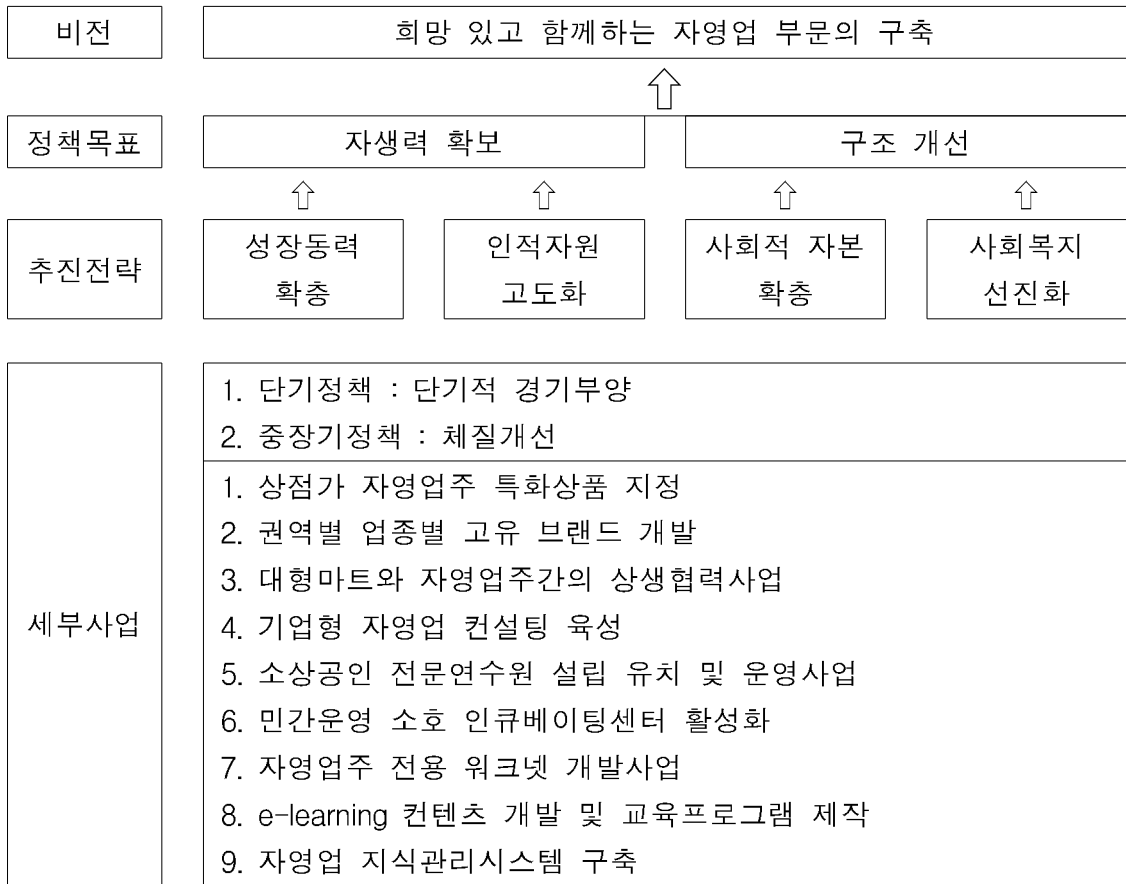
③ 사회적 자본 확충

- 자생의지 확충 및 정책의존성 해소
- 규제 완화

④ 사회복지 선진화

- 균형성장을 통한 양극화 완화
- 양극화 완화를 위한 취약업종의 구조개선 촉진
- 사회안전망 체계 구축

< 자영업 정책추진 체계 >



2. 자영업정책의 기본방향 및 단·중장기 정책

1) 자영업정책의 기본방향

- 정책수요자들로 하여금 정책에 대한 지나친 기대로 자생하려는 의지보다는 정책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심화되지 않도록 함.
- 생계형 자영업이 아닌 일자리 창출과 여타 자영업의 벤치마킹이 가능한 잠재력 있는 자영업의 확산에 초점을 둔 정책을 추진함.
- 특정 업종이나 업태에 특혜를 주는 지원을 통한 희생보다는 경쟁을 통해 자생력 확보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함.

① 과잉진입 예방

- 상권별 업종별 밀집도와 상권변동 정보를 개발
- 지역신보 특례 보증시 창업자 지원 비중 축소(현행 20%에서 10%)

② 경영안정 지원

- 2010년까지 개별 점포별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 실시
- 컨설팅 결과에 따라 점포당 5,000만원 이내 경영개선 비용 지원

③ 사업전환 및 퇴출 유도

- 프랜차이즈협회 통해 건실한 프랜차이즈 가입 알성
- 프랜차이즈 가입점에 업체당 5,000만원 신용대출
- 구직등록기간(8~9월)을 운영, 자영업자의 구직등록 유도
- 기계, 운송장비 등 직종 중심으로 3~6개월 과정 무료 직업훈련 실시

2) 단기정책 : 단기적 경기부양

① 정책목표

- 단기적으로는 자영업 위기의 근본원인이 내수부진으로 인한 매출 감소이므로 저금리 기조 유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등
 - 공적보증을 통한 대출만기 연장
 - 내수활성화 대책 실시
 - 생계형 창업자의 양산 억제
 -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확보 지원

② 정책내용

- 생계형 금융지원
 -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 확대
 - 자영업 생계형 대출 규모 확대
- 글로벌 규모 행사와의 연계, 경기활성화 대책 마련
 - 다문화 음식거리 조성
 - 숙박업소의 영어 안내 및 통역 연결 기능 확충
 - 음식문화 및 숙박시설 홍보망 구축
 - 간판 문화의 정비(Art design 장려책 : 창조도시와의 연계)
 - 전국체전 및 IAC 행사시 관련 문화컨텐츠 동시 개최를 통해 관광객 집적 효과 극대화
 - 대전상징물 건립을 통한 도시브랜드화 추진

- 적절한 검증 절차 통한 공적인 신용보증 제공
 -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획일적으로 대출 만기를 연장하도록 하는 대책은 해당 금융기관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킬뿐만 아니라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도리어 부실을 키울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매출실적, 향후 사업전망 등을 고려한 적절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통과한 자영업자에게 공적인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대출만기 연장 및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바람직
 - 이와 함께 자영업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대출 및 회수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경쟁적인 대출금 회수로 인한 자영업 부채 위기의 확산을 사전에 억제해야 할 것임

2) 중장기 정책 : 체질 개선

① 정책목표

- 광역경제권 추진, G-10 사업과 연계하여 대전경제권을 포괄하는 중소유통물류센터, 소상공인 전담 금융인프라 구축 등 소상공인 전문 인프라 구축을 지원

② 정책내용

- 중소유통물류센터 지원
 - 지역 중소유통업체와 제조업체가 연계하여 전문화된 통합물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광역권 『중소기업 공동집배송센터』를 설립, 운영
- 소상공인 전담 금융인프라 구축
 - 소상공인의 영세성 극복 및 점포합병, 혁신점포 육성 등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전담 금융기관의 설립, 운영
 - ※독일 스파르카센(Sparkassen)
- G10 구상과 연계된 지역상권제도 도입과 활성화
 - 대전광역경제권의 형성과 연계하여 G10 지역과 광역상권의 연계 교통망 및 환경정비
 - 도심 중심시가지의 상권활성화 도모를 위해 환경정비와 상권활성화를 위한 자발적 비영리 민간협의회 조직과 활동 지원
 - ※뉴욕 맨하튼 Time Square Alliance, 필라델피아 Center City District

-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임금피크제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생계형 창업자의 양산을 억제하고, 과잉상태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임금근로자로 전환시켜야 할 것임
 - 증가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임금근로자 비중은 여전히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기 때문임
- 퇴직자 전환 프로그램의 활성화
 - 퇴직이전에 익힌 기술 및 지식을 활용한 창업을 유도
 - 경영 노하우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덜어 주기 위하여 경영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 고려
-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자영업에 대한 지원도 추진되어야 하나 사회구성원 전체적인 관점에서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생계유지도 곤란한 한계 자영업들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사회복지정책적 차원의 지원 필요
 - 경쟁에서 탈락한 자영업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쟁을 촉진하며, 공제제도 등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불확실성을 완화
 - 재도전의 역량을 구비하지 못해 사업을 그만두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생계해결이 불가능한 경우는 엄격한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선별하여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적용

3. 사업제안

1) 상점가 자영업주 특화상품 지정

① 정책목표

- 자영업주의 자구노력을 유도하여 자영업주의 경쟁력 강화
 - 자영업주별로 특성화를 장려하여 스스로 전문성을 갖춘 자영업주로 거듭나도록 자극과 자긍심을 도시에 부여함.
- 권역별 상권 활성화를 통한 자영업주의 자생력을 감화함. 강화
 - 전문성을 갖춘 자영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화하여 그 지역 상권 내지는 상점가를 전문화 또는 특성화하도록 유도

② 정책 내용

- 상점가 자영업주의 조직화
 - 대전광역시에서 권역별로 소상공인회를 조직 육성
 - 상공인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로는 자영업주 교육지원, 교육에 참가한 자영업

주들에게 해외상점가 방문지원, 홍보지원, 판촉지원 등을 포함

- 일점일품운동에 대한 지원(일본 오사가 후세 상점가 시행)
 - 권역별로 특성화를 추진하기에 앞서 일점일품운동 지원. 즉 근린생활형인 지역에서 각 점포별로 상품자체 또는 가격면에서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을 중심으로 일점일품운동 먼저 전개
 - ※ 권역별로 특성화가 가능한 상점가에서는 권역별 특성화를 먼저 실시한 후 일점일품인증이 가능함.
 - 상점가 자영업주 특성화 실시
 - 일점일품운동을 통하여 권역별로 전문상점가를 특성화하여 지원함.
 - 예컨대 의류전문지역으로 육성할 경우 의류업종의 자영업주에 대해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정책자금을 집중 지원함과 동시에 그 지역이 의류전문상점가로 구성될 수 있도록 입간판이나 도로 정비, 그 밖의 환경사업을 지자체 주도로 실시하고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 지원함.
- ※ 상점가 자영업주 특화상품 지정을 위한 로드맵
- 상점가별 자영업주 조직 결성
 - 자영업주별 특화상품 선정 자문지도
 - 자영업주별 특화상품 선정

2) 권역별 업종별 고유 브랜드 개발

① 정책목표

- 1단계 : 스타소상공인제도의 확립
- 2단계 : 소상공인 품질인증제의 확립 후 소상공인 고유브랜드의 개발

② 정책내용

- 1단계 : 소상공인 품질인증제도의 확립
 - 소상공인 품질인증 평가단의 구성
- 2단계 : 소상공인 고유브랜드의 개발
 - 소상공인 품질인증제의 확립 후 권역별 업종별 고유브랜드의 개발
- 스타소상공인제도가 충분히 확산된 소상공인조직에 대하여 업종별 또는 권역별로 공동 브랜드의 추진

3) 대형마트와 지역내 자영업주간의 상생협력 사업

① 정책목표

- 대형마트의 지역 진출시 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

- 지역주민의 쇼핑편리성의 제고와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향상에 기여

② 정책내용

- 대형마트 개설시 지역소상공인의 입점
- 지역상품의 대형마트를 통한 판로 개척
- 대형마트내 일정 면적의 지역 자영업주 코너를 별도로 지정

※ 대형마트와 자영업주 간 상생협력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 지역별 소상공인회 조직
- 대형마트 특별코너청약 자격기준 수립
- 입점청약 희망자 모집 및 선발
- 대형마트내 특별코너 시범운영

4) 기업형 자영업 컨설팅 육성

① 정책목표

- 현재 영세한 컨설팅 사업을 고도화시키고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기반을 마련, 자영업 컨설팅의 수준을 끌어올림으로써 자영업 성공률 제고
- 컨설턴트들 간의 연합을 통해 영세 개인컨설팅 사업자들의 협업화 유도

② 정책대상

- 자영업 컨설팅사업 지원 서비스업종사자(요리, 간판, 서비스교육, 판매교육, 메뉴개발자, 디자이너, 이벤트 기획자, 창업 및 경영컨설턴트, 마케팅 전문가, 점포 운영 유경험자 등)

③ 정책내용

- 컨설턴트들의 연합 네트워크로 구성된 기업형 컨설팅 사업자의 경우 컨설팅 지원 한도를 높여 줌
 - 개인 컨설턴트 : 단순 컨설팅 쿠폰
 - 기업형 컨설턴트 : 재래시장 컨설팅 등 금액이 큰 컨설팅 참여기회 제공
- 기업형 컨설팅 참가 희망업체는 컨설턴트 5인~10인 이상의 연합으로 회사를 설립 또는 컨설턴트 네트워크를 거느리고 회사 단위로 컨설팅 실적을 평가 받음
- 우수한 기업형 컨설팅 업체들에게는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 부여
- 자영업 관련 프로젝트의 수행에 우선적인 기회 부여
- 컨설팅 비용은 민간 중심으로 유료로 운영되며,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형태로 운영, 향후 기업형 컨설팅 업체의 자체적인 생존이 가능하도록 유도

5) 소상공인 전문연수원 설립 유치 및 운영사업

① 사업목적

-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은 경영기법이 매우 낙후하여 교육을 통한 경영혁신 및 역량강화가 필수적임.
- 그러나 제조업을 비롯한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개인서비스업 등의 소상공인들은 대전의 지역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해 전문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공공장소는 부재
- 체계적인 소상공인의 교육이 가능한 전문연수원을 건립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② 주요내용

○ 정책목표

- 체계적인 종업원 교육 및 소상공인 CEO 교육 실시를 통한 소상공인의 기업가정신 함양 및 종업원의 실무·현장응용능력 향상
- 현장 실무중심의 연구강좌 및 쾌적한 연수환경 제공을 통한 소상공인 인재양성 확대

○ 정책대상

- 예비창업자, 기종 자영업주 CEO, 종업원, 컨설턴트, 상담사, 단체 등 교육이 필요한 모든 대상
- 가장여성예비창업자, 장애인, 생계형 소상공인 등 우선대상 고려

○ 정책수단

- 자영업주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업종별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교수진을 구성하여 이론을 겸한 실무 및 현장중심의 교육 실시
- 최신 실습장비, 시청각 시설, 전산 및 정보화 시설, 도서 열람 등 정보 공유가 가능한 도서관 등의 부대시설 완비
- 산학협력연수 및 국내외 우수연수기관과의 협력으로 진행

③ 운영체계 및 시설

○ 운영원리

- 정책목표의 대상인 소상공인의 연수는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직접지원보다는 일정부분(저렴한 연수비용)은 교육연수 수요자가 지불하도록 유인
- 연중 무휴 원칙 : 소상공인은 1인 사업체, 생계형, 영세사업자, 가족기업, 전통산업, 서비스업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교육이나 연수를 위해 시간을 배려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이므로 소상공인들이 원할 때, 언제 어디서든지 교육이나 연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관리체계

- 소상공인연수원장, 연수운영부, 교수단운영부, 등으로 조직 구성
- 시설
 - 교육시설 : 대강당, 소강당, 강의실, 분임토의실, 세미나실, 실험실습실, 자료실
 - 복지시설 : 식당, 의무실, 휴게실, 쉼터, 매점, 노래방, PC방, 아쿠아피아
 - 숙박시설 : 1인실, 2인실, 4인실, 10인실
 - 체육시설 : 축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배구장, 탁구장, 체력단련실
- 소요예산 : 1,105억
 - 부지매입 : 600억(부지면적 60,000평, 평당 100만원)
 - 신규시설 설비 : 480억(건면적 12,000평, 평당 400만원)
 - 운영관리비 : 25억

6) 민간운영 소호 인큐베이팅센터 활성화

① 정책목표

- 경쟁이 과열된 외식업 창업을 자제시키고 고학력 화이트칼라 및 청년 창업자 등의 서비스업 창업을 지원하고 성공률을 높임.

② 정책 대상 및 수단

○ 정책대상

- 인큐베이팅 센터의 운영이 가능한 컨설팅 회사 및 컨설팅 기능을 갖춘 공동사무실이나 비즈니스센터 운영자 등과 서비스업 창업 희망자 및 기존 소호 사업자

○ 정책수단

- 정부 보유 시설물 및 각종 학교 공공기관의 건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
- 민간 사업자 초기 또는 실적 평가에 따라서 약간의 보조금 지급 후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

③ 정책내용

○ 주요 지역별 인큐베이팅 센터 운영 희망자 접수

- 운영자격 대상자 : 학교, 인력개발센터, 컨설팅회사, 학원 운영자, 비즈니스센터 운영 유경험 사업자

○ 정부지원 방안 1 : 인큐베이팅 대상 시설기반 마련

○ 정부지원방안 2 : 민간 인큐베이팅센터 지원

○ 인큐베이팅 센터 입주 대상자 선정 및 운영원칙 확립

7) 자영업주 전용 워크넷 개발사업

① 정책목표

- 자영업주에게 인력수급정보를 신속·원활하게 제공함으로써 자영업주가 직면하는 인력 부족률을 낮추도록 함.

② 정책내용

- 지자체나 중소기업청이 자영업주와 이들 사업체에 취업하고자 하는 구직자에게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소상공인 전용 워크넷을 개발
- 아울러 소상공인 전용 워크넷을 노동부 등 여러 기관이 제공하는 워크넷과도 연계토록 함.
- 소상공인 전용 워크넷을 제공하는 PC를 지자체,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 비치

※ 소상공인 전용 워크넷 개발을 위한 로드맵

- 노동부 등 워크넷 설치 기관 벤치마킹
- 소상공인 전용 워크넷 프로그램 개발
- 소상공인 전용 워크넷 지원 서버구축
- 소상공인 전용 워크넷 시범 실시

8) e-learning 콘텐츠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제작

① 정책목표

- 자영업에게 교육을 통한 준비된 창업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으로 연결시킴
- 자영업 발전단계별(창업전 준비-창업-성장단계-구조조정)로 역량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익성을 향상시킴
- 새로운 업종으로의 전환이나 폐업에 필요한 각종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구조조정을 촉진시킴
- 업종별(음식업, 도·소매업, 사업서비스업 등)로 특수 지식이나 노하우를 제공

② 정책내용

- 창업준비, 창업,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및 전업이나 폐업들의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 업종별(유통업, 음식업, 사업서비스업 등)로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③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제작

- 대상업종 및 교육과목 선정
 - 대상업종 : 업종별 10~16개 주요업종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개인서비스업 등)
 - 교육과목 : 창업, 기업가정신, 시장조사, 자금, 입지, 마케팅, 경영전략, 회계 및 세무 등 기능별로 과목 선정
- 이러닝 콘텐츠 개발

- 디자인(메인페이지), 홈페이지 구축, 동영상 촬영 및 편집, 녹음 및 효과음
- 교육프로그램 제작

9) 자영업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① 정책목표

- 자영업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여 경영활동에 활용하도록 하여 자영업들의 경영역량을 강화함.
- 자영업주 상담사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창출, 축적, 관리하여 상담사들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자영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함.
- 자영업 정책담당자가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소상공인정책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임.

② 정책내용

- 자영업 관련 지식을 기능(창업정보, 경영관리, 입지, 자금, 마케팅, 구조조정이나 전업, 세무, 회계 등)과 업무(문제 인식, 대안 제공, 사후관리 등)를 분석하여 이에 상응하는 지식매트릭스(knowledge map)를 작성하여 각 매트릭스에 해당하는 지식을 콘텐츠화함.
- 지식의 내용에 따라 자영업, 상담사, 자영업 전문가, 정책담당자가 접근할 수 있는 정도를 차별화하여 키워드나 문장 형식의 텍스트를 통해 언제든지 추출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함.

4. 장기 추진과제 및 향후 연구과제

1) 장기 추진과제

- 선택과 집중에 의한 경쟁력 있는 서비스업분야 자영업주 육성
-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업종전환 유도
 - 경쟁력 없는 자영업주의 업종전환 필요
 - 업종전환 자영업주에 대한 창업 및 경영기법 등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업종전환 자영업주들이 도·소매 및 음식업종의 소비부문보다는 일차적으로는 사업서비스 부문으로 업종전환을 유도
- 자영업주의 경영마인드를 고려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기술사업화에 의한 벤처창업으로 유도, 또는 제조업부문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체로 육성 필요
- 제조업부문 대형유통점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체 창업 유도

2) 향후 연구과제

- 향후 일정 연구기간을 확보하여 자영업주에 대한 설문조사 등 실사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실태파악 및 문제점 도출, 수요지향형 정책대안 제시가 필요함.
- 현재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2005년 서비스업 총조사에 한정되어 있어 최근 동향 파악에 한계, 2008년도에 실시한 서비스업 총조사가 마무리되는 내년에는 보다 업데이트된 동향 분석이 가능
- 도소매, 음식 및 숙박업의 콘텐츠 산업화로의 고도화 유도 방향이 향후 이들 업종의 경쟁력 및 창조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일회적 대책보다는 문화 산업 범주에서의 접근이 필요함

※ 연구용역

- 충분한 연구기간(1년)과 예산(최소5천만원)을 확보하여
- 자영업주에 대한 실사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실태 파악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 부문별 수요지향형 정책대안 제시 필요